

# 원희룡 장관, 부산 신항 찾아 비상수송대책 이행 점검

- 물류수송 차질 최소화 강조, 운송방해 불법행위 무관용 대처 천명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 첫날인 11월 24일(목) 오후 8시경에 국내 최대 해양물류 핵심 거점인 부산 신항에 방문해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, 비상수송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면서, 정상 운영을 실시하는 화물차주를 독려했다.
- 원 장관은 부산신항 컨테이너 운송 현황과 애로사항 경청하고,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부산 지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하였으며,
  - 물류업계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부산항의 장치율이 상승하고 있고, 선박에서 수입화물을 제대로 하역하지 못할 경우 수출 화물의 선적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것에 대해 “비상수송대책을 최대한 가동하여 물류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까지 검토하고 있다”고 답변했다.
- 이어서 원 장관은 “그간 정부는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으며,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”이라면서,
  - “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 국가 경제와 민생을 불모로 삼는 집단운송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대화에 적극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”한다고 밝혔다.
- 특히 “최근 전세계적인 경기하강 우려, 고유가·고환율 등으로 국가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, 화물연대의 이윤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기적인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전반의 큰 피해를 끼치는 악의적인 행태”라고 지적하면서,

- “물류는 민생경제의 혈관인 만큼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운전자에 대한 운송방해, 협박, 위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고, 불법 과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”고 천명했다.
- 또한, 원 장관은 “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한편,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”고 재차 강조하면서,
- “항만, 내륙의 물류 기지 등 주요 물류 지점에 경찰력을 배치하여 운송방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일선의 화물차주 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”고 밝혔다.

2022.11.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